제69호
발행일 2020년 10월 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
International Relations: Trends and Analysis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1, 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요 약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2020년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거래적(Transactional) 동맹관을 갖고 있고,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는 전통적(Traditional) 동맹관을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대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동맹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양 후보 중 누가 당선된다고 하여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공조 네트워크를 충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실무협상에서 우리 측이 배제된 상태에서 스몰딜(Small Deal)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맹의 유지 · 관리적 측면에서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이미 지연된 상황이므로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미일방위비분담협상 상황을 참고하는 한편, 분담금 문제가 주한미군철수 등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OECD 정책 동향

OECD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기까지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OECD 회원국 정부는 세제혜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임시고용과 단기 근로계획 등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훈련과 일자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개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장기적 안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제관계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주간으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김 도 희 _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02-6788-4556 / doheekim@assembly.go.kr

1. 들어가며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 예측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글로벌 리더십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즉시 이를 회복시킬 것을 공언하고 있어 선거결과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 각 종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5~7% 이내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복잡한 상황들은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후보 지명과 함께 공개된 양 후보의 대외정책 중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1]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미국 리더십의 회복(Renew American Leadership)'을 기조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정부 이전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복원하고자 한다. 즉,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전 세계적인 미국의 지도력 약화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복원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다수 국제기구 및 협정 등에 재가입하는 것, 즉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양 후보는 대외정책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동맹정책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동맹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은 간단히 말해서 거래적(Transactional) 동맹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전통적인 동맹관과 달리, 동맹국 간 주고받는 비용과 편익이 금전적으로 거래되어야 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defense burden sharing)의 확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1) 주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공식 선거 웹사이트에 게재된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양 정당의 정강정책(policy platform)을 참고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29.), 〈https://www.donaldjtrump.com/media/trump-campaign-announces-president-trumps-2nd-term-agenda-fighting-for-you/〉
- 바이든 후보 공식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29.), 〈https://joebiden.com/americanleadership/〉
- 공화당 정강정책(최종 검색일: 2020.9.29.) 〈https://prod-cdn-static.gop.com/docs/Resolution_Platform_2020.pdf?_ga=2.165306300.2055661719.1598124638-455285808.1584478680〉
- 민주당 정강정책(최종 검색일: 2020.9.29.), 〈https://democrats.org/where-we-stand/party-platform/〉

공정한 그들의 몫을 지불하도록 유도(Get Allies to Pay their Fair Share)"하는 것을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 간 "공정"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 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방위비 증액기준(GDP 대비 최소 2%)을 충족하지 않은 독일 주둔 미군 12,000명을 철수 또는 재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국방비를 충분히 증액하지 않고 미군 주둔의 이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을 철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미 의회는 주독 미군 철수는 NATO의 약화 및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초당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2)]

한편, 민주당 정강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동맹국들을 대체 불가한 국가안보의 초석으로 인식하며, "우리의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국들 간의 긴장을 조장하기보다"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상호방위규정(Article 5)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저버리고, 협의 없이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의 핵 위기 속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동맹국을 갈취하려(extort)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재구상할 것(Restore and Reimagine Partnerships)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NATO,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산재한 미국의 동맹들과 협력하여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 또한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결속을 통해 중국에 대항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대중국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 대북정책

공화당의 정강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는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하노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이후 김정은과의 친서외교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존 탑다운(Top-down) 방식의 대북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북한과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며 자신의 연임이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3)]

반면, 바이든 후보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독재자를 정당화해주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한 바 있다.[4)]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전제조건(preconditions)없이 김정은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5)] 또한 바이든 후보는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실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과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맹국들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공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과는 달리 바텀 업(Bottom-up)방식의 협상과 다자주의 방식을 통한

2) CNN, 2020.7.29.(최종 검색일: 2020.9.27.), 〈https://edition.cnn.com/2020/07/29/politics/us-withdraw-troops-germany/index.html〉

3) VOA News, 2020.8.26.(최종 검색일: 2020.9.25.), 〈https://www.voanews.com/usa/trump-or-biden-n-korea-problem-wont-go-away〉

4) CBS NEWS, 2019.6.30.(최종 검색일: 2020.9.27.), 〈https://www.cbsnews.com/news/biden-2020-campaign-accuses-trump-of-coddling-dictators-in-meetings-with-kim-jong-un-putin-and-erdogan/〉

5) The Japantimes, 2020.1.15.(최종 검색일: 2020.9.27.),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01/15/asia-pacific/politics-diplomacy-asia-pacific/biden-says-no-way-unconditional-meeting-north-koreas-kim/〉

비핵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 진전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인권상황이 북한과의 대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민주당 정강정책이 "북한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지할 것이고, 북한에게 엄청난 인권유린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양 후보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재의 실질적 효과성 담보 및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양 후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트럼프 vs. 바이든 한반도 관련 정책 비교

트럼프	주요정책	바이든
거래적 동맹	동맹관	전통적 동맹
공정한 분담 강조 대폭 증액 방침	방위비분담금	대폭적 방위비 증액을 갈취(extort)로 규정
철수 가능성 시사 (방위비분담과 연계)	주한미군철수	일방적 철수 가능성 낮음 (협의 없는 주독미군 철수 비난, 전통적 동맹 강화 강조)
탑다운	대북협상방식	바텀업 (협상가에 권한부여)
재선되면 조속 개최	정상회담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 불가
언급 없음	북한인권	개선 강조
필요	중국 참여	필요

출처: 관련자료 참조하여 필자 정리

3. 한반도 관련 정책 전망 및 시사점

1) 동맹정책 전망 및 시사점

기존에 경험해 본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은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근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정한' 분담을 동맹에게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현재 총액 증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교착상태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MA를 둘러싼 갈등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편,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목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참여 즉, 쿼드(Quad) 참여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6] 쿼드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견제목적의 전략다자안보협의체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참가 또는 불참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상황이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참여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 민주당 정부가 수립될 경우 전통적 동맹관에 입각하여 한미동맹은 비교적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동맹의 유지·관리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중심의 다자주의 방식이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강경 기조 면에서 트럼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 오히려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응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다수의 외교 사안에서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바이든 진영이 한국, 일본, 호주를 아시아의 동맹국으로 언급하고, 협력 강화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가 연상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동맹 관리의 관점에서 한일 간의 갈등에 개입할 수 있다. 과거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로 인해 야기된 한일 간의 갈등을 중재한 사례와 같이 한미일 삼각협력 및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결속 차원에

6) 세계일보, 2020.9.24.(최종 검색일: 2020.9.29.), 〈http://www. segye. com/newsView/20200 924523372?OutUrl=daum〉; 조선일보, 2020. 9.26..(최종 검색일: 2020. 9. 29.), 〈https:// www.chosun. com/ p oliti c s/politics_g eneral/ 2020/ 09 / 2 6/ FS7 JCAASOBC6FLD3LO 3FRQ C NAQ/ ?utm_ source =daum &utm_medium =origina l&utm _ cam paign=news〉

서 한일갈등 해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2) 대북정책 전망 및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후 북한과의 추가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북미 간 교착상황이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미국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이 제재를 해제한다거나 실무협상 없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외교적 치적을 중시하는 재선대통령의 특성상 북한과의 협상에서 깜짝 진전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협상에서 실무협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다자적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제재 지속 하에서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요구하고, 만약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도발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않는 전략이다. 이는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외교적 보상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였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둘째, 바이든 진영의 군축론자들이 대북 협상을 담당할 경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중간 수준 단계의 합의, 즉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그에 맞추어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들 군축론자들의 경우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에 있어 국제기구의 사찰과 검증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제재 완화의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7]

셋째, 오바마 정부 당시 이란 핵협정(JCPOA)을[8]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북한과 핵협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다자방식을 선호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넷째, 민주당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이 대북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북미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인권상황의 개선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4. 우리의 대응방향

지금까지의 미국 대선 후보의 동맹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대응방향을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양 후보의 동맹정책을 고려하면 한미동맹의 정체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대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향후 한미동맹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정체성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 후보 중 누가 당선된다고 하여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공조 네트워크를 충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실무협상에서 우리 측이 배제된 상태에서 스몰딜(Small Deal)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이미 지연된 상황이므로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미일방위비분담협상 상황을 참고하는 한편, 분담금 문제가 주한미군철수 등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

7) 우정엽, 「코로나 19와 미국 대선 및 대외정책」, 『2020년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방향(전문가 간담회 자료 모음집)』,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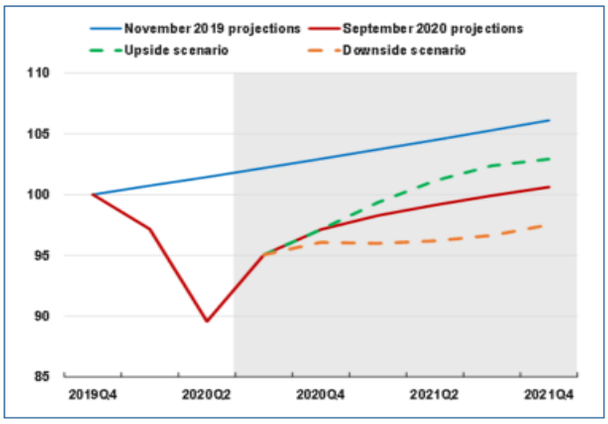
8) 오바마 정부가 주도한 이란 핵 협정의 공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으로, 2015년 7월 14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와 이란이 맺은 합의임. 이란이 핵 활동을 중단하면 제재를 해제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다시 제재가 복귀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이 포함됨.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8일 이란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고, 2020년 8월 20일 스냅백 조항에 따라 제재 복원을 발표한 뒤 이를 유엔 안보리에 통보한 바 있음.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이란 핵합의를 복원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OECD 정책 동향

이 정 진 _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 02-6788-4533 / chaorum@nars.go.kr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동 제한과 국경 봉쇄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실업률 증가와 경제 지표의 악화로 이어졌다.[1] OECD는 2020년 9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락한 세계 경제가 2020년 2월 이후 회복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까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2]

[그림] 글로벌 GDP 전망



참고: 파란 선은 2019년에 예상한 세계 GDP 전망이고 빨간 선은 코로나19 이후 변경된 GDP 전망을 보여줌
출처: OECD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24.), 〈http://www.oecd.org/economic-outlook/〉

다만 백신의 상용화 시점이나 감염병의 재확산 여부 등으로 인해 그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이 빨리 공급되고 국가간 봉쇄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경제 회복이 빨라질 수 있지만(초록색 점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봉쇄조치가 강화될 경우 경제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주황색 점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국 정부가 실행하는 위기 대응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정부는 세제 혜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 임시고용과 단기 근로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3]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 훈련과 일자리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향후 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기존 경제구조나 생활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환경이나 식량, 에너지 문제는 향후 인류가 직면하게 될 문제이며, 이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OECD의 위기극복 노력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이미 개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 경영자금 지원, 채무 상환유예, 휴직 및 휴가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 안목에서 녹색 에너지 정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1) 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봉쇄 등으로 올해 2분기에 세계 경제가 7.8% 급락했으며, OECD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13~20%의 고용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Laurence Boone, "Coronavirus: Living with Uncertainty," 2020.9.16., (최종 검색일: 2020.9.28.), 〈https://oecdecoscope.blog/2020/09/16/coronavirus-living-with-uncertainty/〉

2) 보고서는 2021년 말에야 2019년 말의 경제상황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보았다.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Coronavirus (COVID-19): Living with uncertainty, (최종 검색일: 2020.9.28.),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34ffc900-en.pdf?expires=1601270634&id=id&accname=guest&checksum=2D4AA0A1CAE42E03858E1D033F582B0F〉

3) 지난 1년간 OECD 국가들의 지원정책으로 OECD 전체 GDP의 15%p에 달하는 부채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시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악화된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원정책은 필요하다. Laurence Boone, 2020.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International Relations: Trends and Analysis

NARS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6788-4510(대) 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824-14
ISSN 2733-9661